

객관적 실력점검 기회… 취약과목 보완, 장기계획 세워야

2024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D-7

국어, 1~2학년 전 범위 출제하지만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범위 달라
이과생 비율 사상최고치 52% 예상

새 학기와 함께 2024학년도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3월 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통합 형식의 출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시험인 동시에, 새 학년의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대입 전략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3월 모평은 입시적 해석보다는 '수능 점검 도구'

3월 학평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지 않으며, 실제 수능과 선택과목의 범위적 차이나 졸업생이 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 입시적 해석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국어는 1~2학년 전 범위를 출제하며,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학 I·II의 경우 전 범위를 출제하지만,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는 'I -1.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I -1. 수열의 극한', 기하는 'I -1. 이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곡선'까지만 출제한다.

다만 모의고사는 전국단위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내신보다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첫 모의고사인 만큼 과목별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 과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도 "3월 학력평가는 공통과목의 학습 완성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다"며 "고3 학

생들은 아직 수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를 '수능 리허설'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시간대별 행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서 자신이 가장 편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오답의 원인을 분석해 틀린 문제는 다시 풀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과서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오답이 많다면, 문제풀이만 할 것이 아니라 개념 이해

부터 다시 학습하는 등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학년도 '이과생' 역대 최고…수학 상위권 70%는 '언어와 매체' 선택

종로학원에 따르면 이과 선호 기조가 유지되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과생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52%로 예측됐다. 2012학년도 이전까지 30%대, 2022학년도까지 40%대였다. 이에 따라 문이과 교차지원 변수는 올해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과 상위권 증가로 이과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문과는 학생 수 감소로 수능 고득점자 수가 줄어들고, 합격선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도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성적과 큰 연관성을 보이는 선택과목에서는 이과생들이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고 분석됐다. 진학사에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을 입력한 수험생 17만148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학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험생 중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은 70.4%에 달했다.

◆'벼락치기 수험생'은 대학별 반영 비율 따라 '선택과 집중' 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서 '벼락치기'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교과전형에서 3학년 성적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 3학년에 진로 선택과목 등이 많아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수가 적다면, 남은 1학기로 유의미한 성적 상승 효과 내기 어려워진다.

우선적으로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을 살펴 교과의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전형에서 학년별 가중치를 두지 않고 전 학년 성적을 통합해 계산한다. 진학사가 정리한 2024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중 일부 교과 반영 대학 예시에 따르면 가천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여대, 한국항공대 등이 있다. 가천대는 우수 4개 학기,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 중심, 동국대는 석차 등급 상위 10 과목 등 대학별로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다. 교과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임에도 막연히 '고3 벼락치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학별 교과 반영 비율에 따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전남대 등 4곳서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농식품부, 중소식품업체 경쟁력 제고
기업맞춤형 계약학과 운영하기로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이 푸드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를 통해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4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제조공정 등을 통해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등을 통해 식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등 푸드테크가 지방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올해도 푸드

테크 계약학과 운영 신규 대학을 지방 대학 중심으로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5개교가 응모했으며, 푸드테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중소식품업체의 교육수요를 교과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와 기업의 실질적 교육수요, 교과 운영인력·시설 등 학교 역량, 교과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중점 평가하고 학교 현장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올해 신규 계약학과는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으로 운영되며,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각 대학은 올해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

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학기당 3500만원 이내), 학생 등록금(총액의 65%), 기업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000만원 내외) 등 학교당 최대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추가 개설되는 계약학과는 지방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를 확대하는 구심체로서, 중소식품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푸드테크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사립대 재정위기… 교직원 임금 15년 '동결'

대학노조 "늘어난 예산들은
교직원 임금 등에는 사용 못해"

대학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사립 대학 교·직원들의 임금도 사실상 15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지만 교육 당국은 사업비 형식의 재정 지원만 확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직접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되, 지원되는 일반재정 예산의 최

소 50% 이상을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대학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의 교육세 3조를 고등교육으로 넘기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통과시켜 고등교육 예산을 기존보다 늘렸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운영예산 중 인건비가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늘어난 예산들을 교·직원의 임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하은 기자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개선

외부 투자활성화 기대감

대학이 보유한 산학협력력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 비율이 개선되고, 자회사 설립 범위가 확대된다. 일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외부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

졌다.

교육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력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

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 산학협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후, 2008년 7월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현재 80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동안 기술지주회사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자회사가 증가했으며, 투자회수율 상승은 대학의 수익 창출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 기여했다. /신하은 기자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일자리연대 "노동개혁 필요…국민적 지지 확보 우선 과제"
▲시민사회단체 "尹, 일본 태도 안 변하면 결렬 선언해야" /사진 뉴스1

▲검찰 "중학교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 가혹행위 학생 2명 기소
▲학비연대, 31일 '신학기 총파업' 재확인…돌봄·급식도 쟁점



▲한국노총 위원장 "주69시간제, 70년 전 노동법…완전 폐기해야" /사진 뉴스1
▲'할아버지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 SN S에 5·18 단체 "환영"